

이명박 정부 '반쪽'으로 출발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인수해 임기를 시작했지만 내각 구성조차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무위원들이 임명되지 못한데다 이준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식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자진사퇴, 상황에 따라서는 국무회의 구성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정외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주요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법률안, 군사에 관한

내정자들 잇단 의혹...새 내각 구성도 못해 대통령실장·수석 등도 기존 직제로 임명

중요사항 등 국정외의 주요 정책사항이 총괄돼 있다는 점에서 정부 현안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물론 참여정부 마지막 각료들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형식상의 국무회의는 구성되어 있지만 이 대통령이 자신이 내정한 장관들을 제쳐놓고 참여정부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통합민주당이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하는 등 26일에도 정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 조직을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줄임에 따라 새 여성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당장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청와대측은 "여성부 장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15명의 장관으로 의제해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각료 후보자 자격 시비 논란이 이준호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그치지 않을 경우 '반쪽 정부'의 상황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새로 개편된 청와대 비서실 직제안도 국무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새로운 직책 내정자들은 당분간 기존 청와대 직제에 따라 임명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실용외교로 변화 이끌 것”

■ 새 정부 출범 각국 반응

◇미국=워싱턴 조야는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반세기 넘은 한미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진보성향의 한국 정부가 퇴진하고, 실용 운건보수 노선의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특히 내년으로 55주년을 맞는 한미동맹관계를 비롯하여 북핵현안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추진 등 한미관계 전반에 굳건한 동반자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과의 국제 교류협력력이 크게 증진되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주변국은 특히 FTA나 대북관계를 비롯 자국과 관계가 깊은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해운 과거사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대일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한국과 중국은 새로운 역사상의 시점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미 울들어 한국과의 관계를 격상시킬 뜻을 공식 석상에서 두 차례나 분명히 했다.

◇러시아=러시아 역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과의 경제 교류협력력이 크게 증진되면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

美 대북 일치된 생각...한·미관계 진전 전망
日 과거사 문제 탈피, 우호·협력 증진 기대
러 취임식에 서열 2위 파견 '자원외교' 주목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중인 당사위안 국무위원이 24일 서울에서 열린 초대회에서 한 이 발언에는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희망이 담겨 있다.

이 희망은 “한·중 관계는 새로운 형세 아래에서 틀림없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내 새로운 단계로 격상될 것이다”는 당사위안 위원장의 말에서 구체화된다. 중국은

■ 李대통령 어떤 예우 받나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대통령이 받게 될 보수 등 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간 보수는 1억6천867만1천원이며, 여기에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합하면 전체 연봉은 2

연봉 2억 863만원...2주에 한번 건강체크

억863만1천원까지 올라간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의 전체 연봉보다 508만9천원이 오른 액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의전·경호 수준도 이날 오전 0시부터 '대통령 당선인'에서 '국가 원수'로 격상됐다.

청와대 경호실장이 이 대통령 주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인수해 경호에 들어갔다. 특수 방호차량인 벤츠 S600 가드는 물론 GM의 캐딜락 드빌 리무진과 포드의 링컨 컨티넨털, BMW 등 전용차량이 제공된다.

또 미사일 추적 기만장치와 적외선 방해 장치 등 각종 첨단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진 전용 헬기(S-92)를 운용하게 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와 전용 열차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주치의로부터 평균 2주에 한번 씩 건강을 체크받고,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 병원의 최고 의료진으로부터 보살핌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조용한 내조’...보육·친인척 관리 역할

■ ‘퍼스트 레이디’ 김윤옥 여사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자정을 기해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함과 동시에 부인 김윤옥 여사도 ‘퍼스트 레이디’가 됐다.

대선 이후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한 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쌓아온 김 여사는 청와대 안 주인이 된 이후에도 평소의 성품대로 되도록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조를 한다는 방침이다.

‘조용한 내조’를 강조하면서도 김 여사가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분야는 유아보육 문제.

대통령 부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장에 박명순 경인 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를 발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도 보육, 복지정책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과외교수’를 받으면서 주로 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해 깊은



이명박 대통령과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25일 취임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관심을 가졌으며 향후 활동도 이에 비중을 많이 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역대 대통령들이 자식을 비롯한 친인

척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는 점을 감안해 친인척 관리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주민 등 8천여명 ‘노란 풍선’ 환영

퇴임 盧전대통령 KTX 타고 고향 봉하마을로

행된 식전행사에서는 진영을 아동복지시설인 진우원의 난타공연과 ‘화’ 무용단의 재즈발레, 김해시립가야금단의 퓨전국악이 공연됐으며 김해문인협회의 환영시 낭독이 이어졌다.

또 밀양역에서는 경남도민과 밀양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 울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온 노 전 대통령과 수레단을 맞는 환영행사가 열렸다.

이날 봉하마을에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차장에 설치된 특수무대에 노

전 대통령이 입장할 때 밝게 되는 폭 1.5m, 길이 50여m의 붉은 카펫이 깔렸고 지역 사회단체들이 보낸 화환 50여개도 진열되는 등 노 전 대통령을 맞이 위한 환영준비가 분주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진영을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준비하기 시작한 1만명분의 국밥은 오전 11시부터 방문객에게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오후 2시가 넘도록 국밥을 맛보기 위한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연합뉴스

